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 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세지식과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

강민조**

<요 약>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y slope framework)은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정부힘(Power of authority)과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라는 두 차원으로 축약하여, 개인별·국가별 조세순응의 차이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의 목표는 납세자 조세순응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자 정책적 도구로 개발된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우리나라 조세환경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회계 교육 및 세정홍보 전략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해당 이론의 비판적 수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세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는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수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정부힘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세정당국이 제도적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 납세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탈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가상적 상황에서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다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단일한 차원으로는 조세순응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차원이 결합되었을 때만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이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에 유용한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납세자 교육 및 세정 홍보는 납세자들이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식을 갖추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조세순응, 정부힘, 정부신뢰, 미끄러운 경사이론, 조세지식

* 본 연구는 2017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장학금지원에 의한 것임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석박사통합과정, minjokang@yonsei.ac.kr, 주저자

I. 서 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세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납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Sussman and Olivola(2011)은 미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경제적으로 무차별한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대안을 훨씬 선호하는 세금혐오(tax aversion) 현상을 보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지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세불응(tax noncompliance)은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위법하거나 법이 의도하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여 조세채무를 절감하는 조세행동을 지칭한다. 납세자 조세순응(taxpayer compliance)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회계학을 포함하여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사회과학 분야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Lamb and Lymer 1999). 일찍이 Crumpley(1973)는 조세법의 제정 또는 조세정책의 실행 이전에 해당 제도의 도입이 납세자 행동에 미칠 함의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무회계 연구자들은 현실의 조세제도에 대한 심층적 이해라는 경쟁우위를 발휘하여 이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의 조세채무를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1차적으로 확정한다. 세무조사는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중요한 통제수단이지만 행정 예산의 제약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자발적 협력을 도모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발견하는 연구는 효과적인 세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납세자 조세순응 행동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축적을 바탕으로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세무당국의 행동적 개입(behavioral intervention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Torgler 2016).

이 연구는 납세자 조세순응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제학과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종합한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틀로서 평가되는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 slope framework)을 우리나라 조세환경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세징운영에 필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회계 교육 및 세징홍보 전략과 연계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대체로 가상의 나라를 상정하여 순수한 이론적 타당성만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체적인 납세환경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비판적 수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끄러운 경사이론이 차별적인 조세순응 의도가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조세환경의 복잡성과 조세지식 수준 차이가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조세상황에 직면

하는 경우 사전적인 조세지식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조세관련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조세관련 지식 및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Ⅱ장에서는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공헌과 한계를 논의한 다음, 주관적 인식과 태도, 조세지식 및 교육의 중요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상정에 기초하여 조세순응을 예측하는 연구가설을 수립한 후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설계 및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미래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Ⅱ. 연구의 배경 및 가설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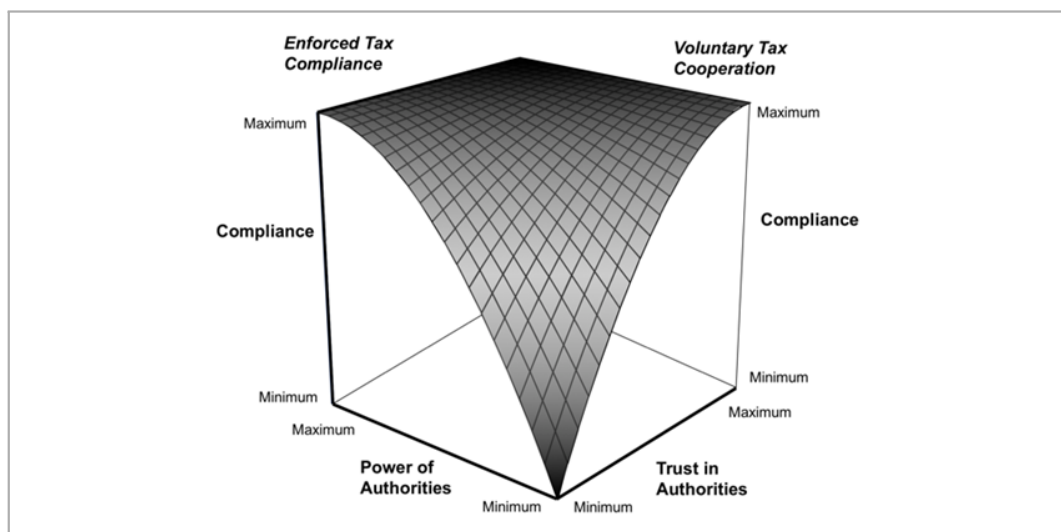
1. 미끄러운 경사이론

납세자 조세순응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세금을 탈루할 기회가 주어진 개인 납세자들의 소득신고 의사결정을 다룬다. Allingham and Sandmo(1972)는 G. Becker의 범죄경제학 이론(Becker 1968)을 과세소득 신고의 맥락에 적용하여 합리적 경제주체가 탈세를 하게 되는 경제적 유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순수경제학이론이 상정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위험을 고려할 때 탈세의 경제적 이득과 탈세가 적발되는 경우 추정될 세금 및 가산세를 비교하여 최적의 탈세규모를 결정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빈번하거나 처벌수위가 높으면 탈세의 매력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면 탈세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시와 처벌에 의한 탈세의 억제에 초점을 두고 납세자 조세순응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을 억제 모형(deterrence model)이라고도 한다.

억제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의 경험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Kirchler et al.(2010)의 광범위한 문헌조사에 따르면 설문 또는 실험실 실험을 이용한 미시적 수준의 연구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억제이론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들이 자주 관찰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현실의 세무조사 위험과 처벌 수위를 놓고 볼 때 거시적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관찰된 조세순응의 수준이 억제모형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실증연구결과를 반복적으로 보고하였다. Alm, McClelland and Schulze(1992)는 순수경제학의 예측과 경험적 연구결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이상현상(anomaly)을 순응의 수수께끼(compliance puzzle)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왜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가?”라는 의문만큼이나 “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적발위험과 처벌수위, 개인적인 이해타산만을 고려한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가?”라는 질문이 납세자 조세순응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납세자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배수진과 심태섭 2011). 경제학이 합리적 경제주체를 전제하고 있는 반면, 심리학은 인간행동의 이면에 놓인 동기와 태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Lewis 1982).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 의도를 형성하는 비금전적인 요인은 통상적으로 “납세의식”으로 지칭된다. 납세의식은 탈세로 인하여 기대되는 금전적 이득이라는 외적 동기(extrinsic motive)와 대비되는 ‘납세의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to pay taxes)’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납세의식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에는 조세윤리(Alm and Torgler 2011), 납세행위에 관한 사회규범(Wenzel 2004), 조세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Wenzel 2003), 시민의식(Feld and Frey 2002), 민주주의와 정치참여 등이 있다(Luttmer and Singhal 2014). Feld and Frey(2007)는 납세자행동을 억제모형이 상징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의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 사이에 체결된 심리적 조세계약(psychological tax contract)의 이행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리적 조세계약 이론에 의하면 납세자는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이 존재하며, 세무당국의 무분별한 감시와 처벌은 납세의 내적 동기(intrinsic motive)를 구축(crowding out)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Frey and Jegen 2001).

〈그림 1〉 미끄러운 경사이론(출처 : Kirchler et al. 2008)



억제모형만으로는 현실 납세자의 조세행동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많은 학자들은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경제학과 사회심리학을 결합한 연구방법론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Alm, Kirchler and Muehlbacher 2012). 이러한 흐름에서 Kirchler et al.(2008)은 납세의 동기에 관한 경제학과 사회심리학 이론을 통합하여 납세자 조세순응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로서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y slope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미끄러운 경사이론은 탈세를 억제하는 경제적 요인을 과세당국의 힘(이하, “정부힘”)으로,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을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이하 “정부신뢰”)의 차원으로 축약한 후,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조세순응의도(compliance intention)의 차이를 설명한다. 미끄러운 경사이론은 조세순응의도를 강요된 순응(enforced compliance)과 자발적 순응(voluntary compliance)으로 구분한다. 정부힘은 강요된 순응을, 정부신뢰는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는 주요 원천이지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에 따라 납세자 조세순응의도의 전체적인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완전한 순응(full compliance)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경로는 정부힘과 정부신뢰 그리고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 효과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3차원의 곡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힘이나 정부신뢰의 어느 한 축이 최대 수준에 다다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상승작용을 이끌어 단일 차원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조세순응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두 차원 중 어느 하나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상호작용에 의한 부정적 하강작용이 가속화되어 조세순응이 가파른 경사를 따라 급격하게 줄어든다. 미끄러운 경사이론은 정책당국이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개인적(미시적) 수준의 순응의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거시적) 수준에서의 조세순응도(level of compliance)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Wahl et al. 2010 ; Kastlunger et al. 2013 ; Kogler et al. 2013 등). 그런데,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대체로 가상적인 국가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한다고 가정할 때 조세순응의도(탈세성향)를 조사한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상적 국가(바로시아)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현황 묘사를 통하여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수준(2×2)으로 처치(manipulation)한 4개의 그룹에 실험참여자들을 임의로 배정한다.

<표 1>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검증에 사용되는 가상적 사례(출처 : Wahl et al. 2010)

정부힘(Power of authority)	
강한힘(High Power)	약한힘(Low Power)
바로시아는 조세법령체계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범을 추적하는데 용이하여 탈세범의 처벌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조세부정행위는 적발되기 쉽상이다. 뿐만 아니라 세무관청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수준 높은 세무조사관을 보유하고 있다. 탈세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략)	바로시아는 조세법령체계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범을 추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탈세범의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조세부정행위는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무관청에 할당된 예산부족으로 조사담당 인력이 늘 부족하다. 탈세가 적발되어도 처벌이 심하지 않다. (하략)

〈표 1〉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검증에 사용되는 가상적 사례(출처 : Wahl et al. 201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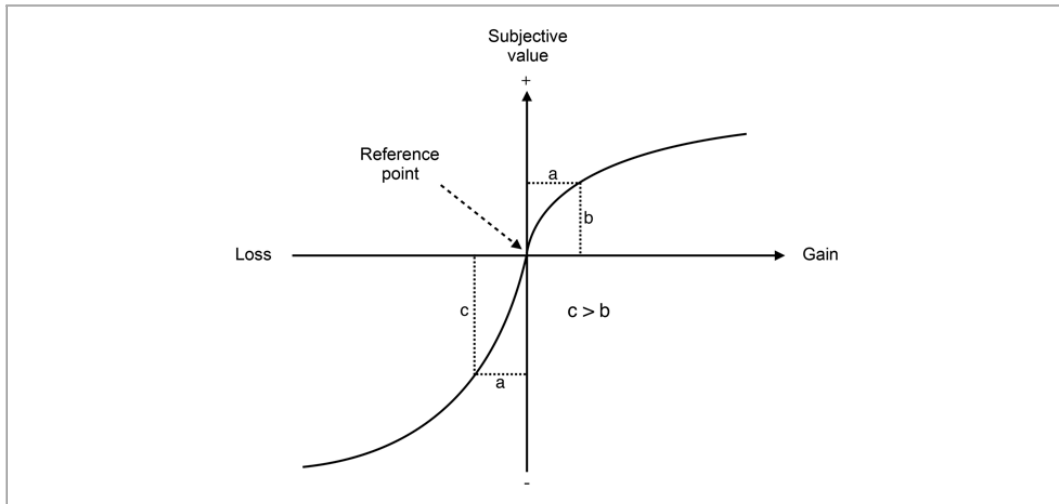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	
높은신뢰(High Trust)	낮은신뢰(Low Trust)
바로시아는 정치적 안정성이 높고 민주적 정부로 정평이 나 있다. 정부의 평판이 좋아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들이 현정부에 만족하고 있다. 세부담은 소득간 직업간 형평성을 갖추어 바로시아 시민들은 모두가 공정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시아의 법령은 투명하고 세무당국은 세무이슈를 무료로 지원하는 정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시아의 당국은 서비스 지향적이고 시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다. (하략)	바로시아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으로 악명이 높다 정부의 평판이 나빠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들이 현정부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세부담에는 소득간 직업간 형평성이 없으며 바로시아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바로시아의 법은 불투명하고 세무당국은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무관심하다. (하략)

2. 조세관련 심리학 이론

납세자들은 다양한 정보에 노출되지만 조세순응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조세시스템의 특성을 적절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법과 조세정책에 대한 상당 수준의 이해 및 해석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반납세자들이 충분하고 적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 또는 맥락에 따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 가령,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이를 가진 가계에 대한 혜택으로 제시된 경우와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제시되는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McCaffery and Baron 2004). Roberts, Hite and Bradley(1994)는 누진세 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누진세를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프로스펙트이론(Kahneman and Tversky 1979)의 가치함수(value function)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택 대안을 평가할 때에는 준거점(reference point)에 의존하며, 이득구간과 손실구간에 따라 가치의 가중치가 달라지고, 반응의 민감도는 체감한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의 맥락에서는 위험추구적인 성향을 이익의 맥락에서는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인다. Schepanski and Kelsey(1990)는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직면할 때 납세(또는 환급)를 주관적 손실로 인식하는 경우 이익의 감소로 인식할 때보다 탈세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조세순응 의사결정에 있어서 프레밍효과(framing effect)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그림 2〉 가치함수(출처 : Kahneman and Tversky 1997)



프로스펙트 이론에 기초한 심리회계(mental accounting)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고통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기업회계에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마음속 계정(mental account)을 이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활동의 주관적 손익을 평가한다(Thaler 1999).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자영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인식할 때 세무회계는 총수령액의 100/110을 부가가치세예수금(부채)로 회계처리한다.

〈표 2〉 세무회계와 심리회계

	세무회계	심리회계
서비스 제공	(차) 현금 110 (대) 매출 100(gain) VAT예수금 10	(차) 현금 110 (대) 이익(gain) 110
부가가치세 납부	(차) VAT예수금 10 (대) 현금 10	(차) 손실(loss) 10 (대) 현금 10

그러나 세무회계지식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총수령액 전부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예수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지만, 세무회계와 괴리된 자영업자의 심리회계는 이를 주관적인 손실로 인식하게 된다. 회계이익(순이익)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프로스펙트이론의 가치함수에 따르면 이익의 쾌락보다 손실의 고통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오스트리아 자영업자들의 심리회계 현상을 조사한 Muehlbacher and Kirchler(2013)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원리를 모르는 납세자 그룹에서 세금에 대한 부정

적 태도가 더욱 강함을 발견하고, 부가가치세 조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숙련 사업자들에게 대한 세무회계(tax accounting practices)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조세제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역할

심적 세무회계(mental tax accounting)는 조세순응의 맥락에 있어서 조세지식의 역할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가령, 조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납세자들이 누진세 구조 하에서 복잡한 세액 산출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기보다는 간편한 방법(이를 심리학에서는 ‘heuristic’이라 칭함)으로 사안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 연말정산에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이 따르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무관한 조세의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 of taxes)¹⁾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하여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산출된다.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원천징수란 정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환급이 대출되는 원천세 과다납부는 합리적인 납세자들이 선호할 만한 대안이 아니다. 그러나 행동세무학 연구자들은 연간 소득세를 정산함에 있어서 납세자들이 추납보다 환급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현상을 반복적으로 보고하였다(Chang and Schultz 1990 ; Schepanski and Shearer 1995). 납세자들은 대개 원천징수의 규모, 세액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간편한 휴리스틱을 이용하여 작년 대비, 주변 동료에 비교하여 얼마나 환급 또는 추징이 되었는지 여부로 본인의 연말정산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우리정부가 경험한 연말정산 대란²⁾은 행동세무학 연구자들이 제기한 원천징수 이상현상(withholding phenomenon)의 교훈을 간과하여 발생한 예견된 혼란이라 할 수 있다.

납세자 조세순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최종학력을 조세지식 수준의 대리변수로 흔히 사용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반적인 교육수준이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조세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

1)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회현상은 친근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표상이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현상을 익숙하게 개념화하는 인지과정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신념 및 사회적 반응을 포괄하는 총체적 지식을 의미한다(최상진 1990).

2)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매월 원천징수 때 세금을 덜 내고 이듬해 2월 연말정산 때 적게 환급받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정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2015년 2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효과 및 근로소득공제 축소의 효과가 혼재됨으로써 연말정산 추납(환급)이 증가(감소)한 근로소득자들의 극심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난 일부 계층을 겨냥한 세법개정안을 긴급히 마련하고 연말정산의 소급적용을 통하여 재정산환급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하였다(Jackson and Milliron 1986). Chan, Troutman and O'Bryan(2000)은 홍콩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음(-)의 관계임을 보고하였다. Devos(2008)는 호주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납세자 집단에서도 조세벌칙(tax penalty)의 구조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빈약함을 발견하였다.

일반적 교육수준보다는 조세 및 재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과 태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iemirowski et al.(2002)은 납세자들의 조세지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수준이 조세순응의 태도 및 행동의사와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Eriksen and Fallan(1996)은 조세법을 수강한 전후 조세순응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조사한 후 조세지식이 조세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영희(2012)는 납세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세금에 대한 인식과 납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4. 납세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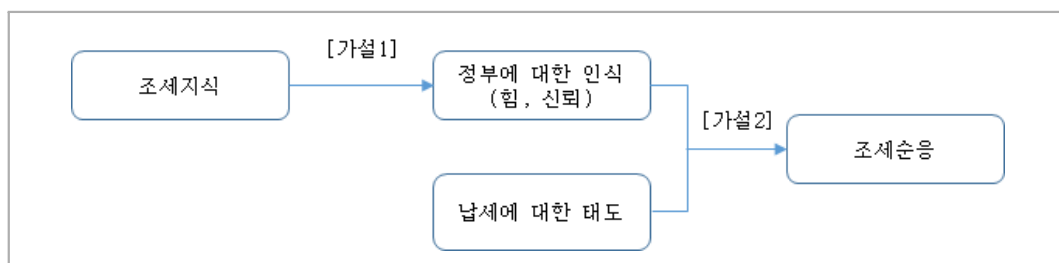
세금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강민조와 백평구 2017). 조세순응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의도적 탈세행위는 사익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야기한다. 사익추구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탈세로부터 기대되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 호혜성, 시민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탈세의 심리적 비용(psychological cost) 또는 성실납세의 주관적 만족감을 크게 평가하여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에 대한 신념 또는 납세에 대한 태도는 조세순응의도(탈세성향)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Alm and Torgler 2011).

전술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가설을 수립하였다.

H1 : 조세지식의 수준은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정부힘과 정부신뢰 및 납세에 대한 태도는 조세순응의도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 연구모형



III. 연구설계

1. 실험참여자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상경대학(경영학 또는 경제학 전공)에 재학 중인 학부생(실제 납세경험이 없는 일반대학원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실험참여자를 자발적으로 모집하였고, 총 107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실험안내 메일을 수령한 후 실험참여 의사를 보내온 실험참여자들을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수준을 2×2 로 처리한 4개의 실험상황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한 후 서로 다른 설문링크를 발송하고 설문결과는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성실한 응답을 독려하고자 5,000원 상당의 온라인 음료교환권(gift card)을 송부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실험(tax experiment)은 경험의 차이, 실험상황의 이해도 차이 등 집단의 이질성이 초래하는 연구 결과의 왜곡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납세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실 납세자의 행동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Alm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실험실에서의 가상적으로 제시한 상황과, 현실인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을 비교한 경우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조세실험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일반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관찰된 행동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2. 설문의 구조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수준을 각각 2×2 로 처치(강한힘/높은신뢰, 강한힘/낮은신뢰, 약한힘/높은신뢰, 약한힘/낮은신뢰)한 후 서로 다른 네 집단을 구성하였다.

가. 정부힘(Power of authority)

Kirchler(2007)는 세무행정의 주요 정책모수인 세무조사확률, 처벌의 규모, 제3자 소득보고 등 탈세의 유인을 억제하는 제반 요인들이 정부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 공식통계, 정책보고서 등으로부터 세무당국의 탈세 억제력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한힘의 처치집단에서는 정부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약한힘의 처치집단에서는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집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3〉 정부힘의 수준에 대한 실험처치

High Power	Low Power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조사기법 개발, 탈세 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탈루수준을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사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 지능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세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탈세제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탈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연간 10억원이상의 조세포탈에 대하여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 OECD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를 탈세할 경우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대답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46%가 탈세 적발 시 벌금 등 처벌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0.8%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나.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따르면 조세제도의 공정성, 납세자에 대한 존중, 세무행정의 편의성 및 중립성 등은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적·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현주소를 다루고 있는 신문기사, 공식통계, 정책보고서 등으로부터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높은 신뢰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낮은 신뢰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집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하였다.

〈표 4〉 정부신뢰의 수준에 대한 실험처치

High Trust	Low Trust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6%는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의 세부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명 중 6명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을 보통 이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일선 세무서엔 민원봉사실이 구축되어 있고,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이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약 70%는 납부한 세금에 비하여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10명 중 4명은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불공정한 세무조사는 금지되고 있지만 위법한 세무조사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세무공무원의 직무태만

〈표 4〉 정부신뢰의 수준에 대한 실험처치 (계속)

High Trust	Low Trust
관련 상담업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60%는 소득세신고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낮거나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이 높게 평가된 덕분에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하였다.	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감면을 해 준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한편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한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1년 사이 1조원 넘게 늘어나 무리한 과세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 조세지식

이 연구에서는 조세관련과목의 수강 경험 유무를 조세지식의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에서 개설되는 조세관련 과목으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세무회계, 재정학 등이 있으며, 이 중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연구 관심변수인 조세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라. 납세에 대한 태도

Kirchler and Wahl(2010)에서 제시한 조세순응의도의 측정도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일부 항목을 추가하여 <표 5>와 같이 납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9점 척도(1 :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9 : 전적으로 동의함)로 수집하였다.

〈표 5〉 납세에 대한 태도

세금에 대한 신념 및 납세에 대한 가치관	나는 가산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
	나는 세무당국에 의해서 적발될 위험 때문에 세금을 낸다.
	피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리석다.
	나는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
	세금이란 싫지만 억지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을 잠재적 탈세범으로 간주한다.
	성공한 탈세는 경영자의 능력을 대변한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나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세금을 낸다.
	나의 성실납세가 궁극적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
	나는 이타심(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낸다.
	성실납세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납세는 사회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되갚는 일이다.
	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마. 조세순응

과세소득의 탈루기회가 주어진 다음과 같은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소득신고성향을 9점 척도(1 : 반드시 누락할 것이다, 2 : 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 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 아마도 누락할 것이다, 5 : 중립, 6 : 아마도 포함할 것이다, 7 : 포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8 :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로 측정하여 조세순응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귀하는 정규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아 세무당국에게 보고되지 않은 현금매출소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요하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겠습니까?”

바. 위험회피 성향 및 기타 통제변수

적발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세무신고 의사결정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선호차이는 탈세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선호는 다음과 같은 도박 상황에서 이길 확률이 최소 몇 %가 되어야 게임에 참여할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응답자가 도박의 최소승산을 높게 요구할수록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귀하가 10,000원을 내고 게임에서 이기면 2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모두 잃습니다. 이 경우 이길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한편, 조세순응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를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사용한다(정아영과 심태섭 2017 ; 오유나 외 2016). 이 연구의 실험참여자들은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측면에서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만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Kastlunger et al.(2010)의 실험연구에 의하면 성별 및 성역할 성향(gender-role orientation)이 조세순응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 또는 여성적 성향이 강할수록 보다 순응적인 성향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사.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실험처치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을 각각 9점 척도(1 :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 9 :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다. 한편, 해당 항목은 실험 처치의 효과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종속변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탈세를 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IV. 실증분석

1. 처치의 효과성 확인(Manipulation check)

<표 6>은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실험집단 간의 평균(표준편차)을 나타낸다. 즉, 각각의 셀은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조작 수준에 따라 2×2로 임의로 배정된 각각의 집단을 의미한다. 강한 힘(High Power)으로 처치한 집단은 약한 힘(Low Power)으로 처치한 집단에 비하여 높은 신뢰(5.19>4.88, $t=0.56$, $p<0.28$) 및 낮은 신뢰(5.09>4.15, $t=1.71$, $p<0.04$)에서 모두 정부힘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높은 신뢰(High Trust)로 처치한 집단은 낮은 신뢰(Low Trust)로 처치한 집단에 비하여 강한 힘(5.38>4.19, $t=2.37$, $p<0.01$) 및 약한 힘(5.07>3.90, $t=1.86$, $p<0.03$)에서 모두 정부신뢰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한 힘으로 처치한 집단 내에서도 정부신뢰를 높게 처치하는 경우 정부힘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고(5.19>5.09, $t=0.20$, $p<0.41$), 약한 힘으로 처치한 집단 내에서도 정부신뢰를 높게 처치하는 경우 정부힘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지만(4.88>4.15, $t=1.17$, $p<0.12$)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실험처치효과가 대체적으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실험집단별로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High Power		Low Power	
	High Trust	Low Trust	High Trust	Low Trust
Perceived Power	5.19(0.36)	5.09(0.32)	4.88(0.42)	4.15(0.45)
Perceived Trust	5.38(0.33)	4.19(0.33)	5.07(0.44)	3.90(0.43)

주1)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2. 가설검정

가. 가설 1에 대한 검정 : 공분산분석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실험처리 상황 및 조세지식의 보유여부에 따라 주관적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분산분석(ANCOVA)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표 7>에서 제시한 단변량 공분산분석에서 조세지식은 정부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지만, 정부신뢰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정부신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형성에는 정부힘의 유의적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정부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형성에는 정부신뢰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다.

<표 7> 조세지식이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패널 A : Perceived Power ¹⁾		패널B : Perceived Trust ²⁾	
	F값	p값 ³⁾	F값	p값 ³⁾
정부힘(A)	3.88	0.051*	0.78	0.378
정부신뢰(B)	2.95	0.089*	10.35	0.001***
상호작용효과(A*B)	1.93	0.167	0.03	0.853
공변량(조세지식)	7.75	0.006***	0.97	0.327

주1) F값=2.95 (p값=0.023), Adj R²=0.068)

주2) F값=2.77 (p값=0.031), Adj R²=0.062)

주3) ***, **, *는 1%, 5% 및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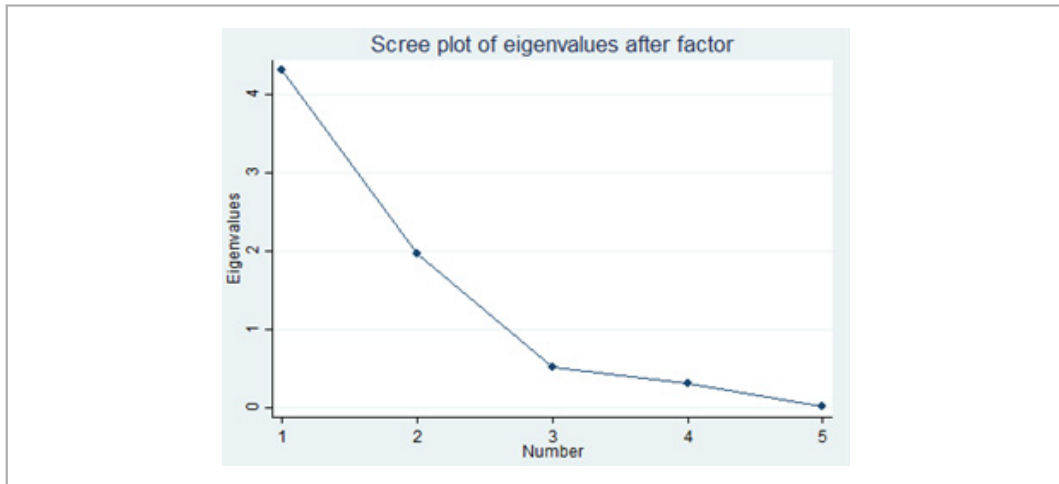
한편, 조세지식이 정부힘·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을 추가로 수행하였다(Kasper, Korgler and Kirchler 2015). 정부힘의 처치효과(F(102)=3.12, p=0.12)는 정부신뢰의 효과(F(102)=5.36, p<0.01)에 비하여 유의적 영향력이 낮게 나타났고,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F(102)=1.51, p<0.22)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변량(조세지식)은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인식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F(102)=4.65, p=0.01)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가설1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세에 관한 지식 보유 여부가 특히 정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정부힘의 차원을 통하여 탈세억제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 가설 2에 대한 검정

(1) 요인분석 : 납세에 대한 태도

요인분석은 동일한 속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항목을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납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4개의 설문항목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리맥스 회전 후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림 3〉 요인의 고유값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실납세는 시민으로서의 의무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요인 1에 강하게 적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나는 세무당국에 의해서 적발될 위험 때문에 세금을 낸다.”, “나는 처벌이 두려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나는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는 요인2에 강하게 적재되었다. 따라서 요인 1은 납세의식을, 요인2는 사익추구성향을 각각 대변하는 요인으로서 납세의 내적동기와 탈세의 외적동기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표 8〉 요인적재

납세에 대한 태도	요인1 : 내적동기	요인2 : 외적동기
나는 세무당국에 의해서 적발될 위험 때문에 세금을 낸다.	-0.057	0.919
나는 처벌이 두려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0.106	0.927
나는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세금은 내지 않을 것이다.	-0.487	0.309
나는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	-0.133	0.743
성공한 탈세는 경영자의 능력을 대변한다.	-0.503	0.264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0.841	-0.135
나의 납세가 궁극적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	0.555	-0.078
나는 이타심(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낸다.	0.171	0.041
성실납세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0.854	-0.082
납세는 사회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되갚는 일이다.	0.529	-0.139
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0.760	-0.062

(2) 회귀분석 : 가설 2에 대한 검정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중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axCompliance = & \beta_0 + \beta_1 Power + \beta_2 Trust + \beta_3 Power * Trust + \beta_4 Intrinsic \\ & + \beta_5 Extrinsic + \beta_6 RiskAverse + \beta_7 TaxKnowledge \\ & + \beta_8 Sex + \epsilon \end{aligned}$$

<변수의 정의>

- TaxCompliance : 조세순응의도(9점 척도) ;
 Power : 정부힘 대한 실험처치. 강한힘=1, 약한힘=0 ;
 Trust : 정부신뢰에 대한 실험처치. 높은신뢰=1, 낮은 신뢰=0 ;
 Power*Trust :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변수 ;
 Intrinsic : 납세의 내적동기에 대한 요인점수 ;
 Extrinsic : 탈세의 외적동기에 대한 요인점수 ;
 RiskAverse : 위험회피성향 ;
 TaxKnowledge : 조세지식. 조세관련과목을 수강한 경우=1, 아니면 0 ;
 Sex :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0.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따르면 정부힘은 강요된 조세순응의도에 정부신뢰는 자발적 조세순응의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와 더불어 전체적인 조세순응을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힘과 정부신뢰 그리고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변수는 조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납세의 내적동기가 강할수록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적동기가 강할수록 적발되지 않은 소득을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납세의 내적동기는 조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외적동기는 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위험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회피성향이 강할수록 세무조사의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탈세도박(evasion gamble)에 참여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회피 성향과 조세순응 의도는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조세관련 과목의 수강여부와 성별의 차이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가설 2를 검정하는 회귀분석결과를 <표 9>에서 제시하였다. 단일한 차원에서 정부힘과 정부신뢰는 조세순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예상과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교섭항은 조세순응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쳤다. 납세의 내적동기가 강할수록 조세순응에 매우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납세의 외적동기가 강할수록 조세순응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외적동기가 강할수록 탈세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정부힘·정부신뢰에 대한 인식 및 납세에 대한 태도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가상적 상황에서 조세순응성향의 결정요인

변수	변수설명	예상부호	종속변수 : 조세순응의도		
			추정계수 ¹⁾	t 통계량	p-value
Power	정부힘	(+)	-0.5884	-1.08	0.282
Trust	정부신뢰	(+)	-0.3368	-0.58	0.561
Power*Trust	정부힘과 정부신뢰	(+)	1.3711*	1.89	0.062
Intrinsic	납세의 내적동기	(+)	0.8413***	4.32	<0.001
Extrinsic	납세의 외적동기	(-)	-0.4117**	-2.08	0.040
RiskAverse	위험회피성향	(+)	1.6997**	2.31	0.023
TaxKnowledge	조세지식	?	0.3690	0.98	0.331
Sex	성별	(-)	0.3292	0.87	0.389
Constant			18.9756	-0.26	0.798
수정 R ²			25.13%		
표본 수			107		

주 1) ***, **, *는 1%, 5% 및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그러나 정부힘과 정부신뢰가 단일한 차원에서 조세순응에 미친다는 점은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통제변수의 경우 예상과 같이 위험회피 성향과 조세순응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였지만, 조세지식과 성별은 조세순응의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 결 론

미끄러운 경사이론(the slippery slope framework)은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정부힘(power of authority)과 정부신뢰(trust in authority)라는 두 차원으로 축약하여, 개인별·국가별 조세순응의 차이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 연구는 납세자 조세순응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이자 정책 도구로 개발된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우리나라 조세환경의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세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미끄러운 경사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무회계 교육 및 세정홍보 전략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비판적 수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조세관련 과목의 수강 여부는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전반적 인식 수준과 유의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특히 정부힘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세정당국이 제도적인 개선의 노

력뿐만 아니라 납세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탈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둘째,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인식은 납세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더불어 가상적 상황에서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다만,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단일한 차원으로는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차원이 결합되었을 때만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세무당국이 조세순응을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부힘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납세자들이 정부힘과 정부신뢰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갖추도록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이 고안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편한 표본(convenient sample)에 의해 수행된 소표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성급하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세지식의 대용변수로 채택한 조세관련과목의 수강여부를 조세지식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지만, 전공별로 개설되는 조세관련 과목의 성격 및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오차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조세지식(조세교육)을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세지식의 어떠한 측면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조세지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계하여 납세자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것은 세무행정전략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교육 커리큘럼의 수립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민조 · 백평구. 2017.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동기적 자세 분석 : 세무대리인 관점”. 대
한경영학회지 제30권 제5호 : 737-764.
- 배수진 · 심태섭. 2011.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215-273.
- 오유나 · 박주영 · 심태섭. 2016. “해외은닉재산의 조세사면제도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
무학연구 제33권 제1호 : 129-166.
- 정아영 · 심태섭. 2017. “국세청의 업종별 평균소득신고율 공개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4권 제2호 : 77-104.
- 최상진. 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 74-89.
- 한영희. 2012. “납세교육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4권 : 135-
158.
- Allingham, M. G., and Sandmo, A.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4) : 323-338.
- Alm, J., Bloomquist, K.M., and McKee, M. 2015. On the external validity of laboratory tax
compliance experiments. *Economic Inquiry* 53(2) : 1170-1186.
- Alm, J., Kirchler, E., and Muehlbacher, S. 2012. Combining psychology and economics in the
analysis of compliance : from enforcement to cooperatio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42(2) : 133-151.
- Alm, J., McClelland, G. H., and Schulze, W. D. 1992. Why do people pay tax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1) : 21-38.
- Alm, J., and Torgler, B. 2011. Do ethics matter? Tax compliance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1(4) : 635-651.
- Becker, G. 1968.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6(2) : 21-38.
- Chan, C. W., Troutman, C. S., and O'Bryan, D. 2000. An expanded model of taxpayer
compliance :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Hong Kong.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9(2) : 83-103.
- Chang, O. H., and Schultz, J. J. 1990. The income tax withholding phenomenon : Evidence
from TCMP data.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2(1) : 88-93.
- Crumbley, D. L. 1973. Behavioral implications of taxation. *Accounting Review* 48(4) : 759-
763.
- Devos, K. 2008. Tax evasion behaviour and demographic factors : An exploratory study in
Australia. *Revenue Law Journal* 18(1) : 1-43.

- Eriksen, K., and Fallan, L. 1996. Tax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taxation ; A report on a quasi-experimen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7(3) : 387-402.
- Feld, L. P., and Frey, B. S. 2002. Trust breeds trust : How taxpayers are treated. *Economics of Governance* 3(2) : 87-99.
- Feld, L. P., and Frey, B. S. 2007. Tax compliance as the result of a psychological tax contract : The role of incentives and responsive regulation. *Law & Policy* 29(1) : 102-120.
- Frey, B. S., and Jegen, R. 2001. Motivation crowding theory : A survey of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5(5) : 559-611.
- Jackson, B. R., and Milliron, V. C.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1) : 125-161.
- Kahneman, D., and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47(2) : 263-291.
- Kasper, M., Kogler, C., and Kirchler, E. 2015. Tax policy and the news : An empirical analysis of taxpayers' perceptions of tax-related media coverage and its impact on tax compliance.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54 : 58-63.
- Kastlunger, B., Dressler, S. G., Kirchler, E., Mittone, L., and Voracek, M. 2010. Sex differences in tax compliance : Differencing between demographic sex, gender-role orientation, and prenatal masculinization (2D : 4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4) : 542-552.
- Kastlunger, B., Lozza, E., Kirchler, E., and Schabmann, A. 2013. Powerful authorities and trusting citizens :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and tax compliance in Ital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4(1) : 36-45.
- Kirchler, E., Hoelzl, E., and Wahl, I. 2008. Enforced versus voluntary tax compliance :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2) : 210-225.
- Kirchler, E., Muehlbacher, S., Kastlunger, B., and Wahl, I. 2010. Why pay taxes? A review of tax compliance decisions. In J. Martinez-Vasquez. J. Alm, & B. Torgler (Ed.), *Developing Alternative Frameworks for Explaining Tax compliance* : 15-31.
- Kirchler, E., and Wahl, I. 2010. Tax compliance inventory TAX-I : Designing an inventory for surveys of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1(3) : 331-346.
- Kogler, C., Batrancea, L., Nichita, A., Pantya, J., Belianin, A., and Kirchler, E. 2013. Trust and power as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 Testing the assumptions of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in Austria, Hungary, Romania and Russia.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 34 : 169-180.
- Lamb, M., and Lymer, A. 1999. Taxation research in an accounting context : future prospects

- an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European Accounting Review*, 8(4) : 749–776.
- Lewis, A. 1982. *The psychology of taxation* : Blackwell.
- Luttmer, E. F. P., and Singhal, M. 2014. Tax Moral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4) : 149–168.
- McCaffery, E. J., and Baron, J. 2004. Framing and taxation : Evaluation of tax policies involving household composition.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6) : 679–705.
- Muehlbacher, S., and Kirchler, E. 2013. Mental Accounting of self-employed taxpayers : On the mental segregation of the net income and the tax due. *FinanzArchiv : Public Finance Analysis* 69(4) : 412–438.
- Niemirowski, P., Wearing, A. J., Baldwin, S., Leonard, B., and Mobbs, C. 2002. The influence of tax related behaviours,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on Australian taxpayer compliance : Is tax avoidance intentional and how serious an offence is it. *Unpublished work*,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Sydney.
- Schepanski, A., and Kelsey, D. 1990. Testing for framing effects in taxpayer compliance decision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2(2) : 60–77.
- Schepanski, A., and Shearer, T. 1995. A prospect theory account of the income tax withholding phenomen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3(2) : 174–186.
- Sussman, A. B., and Olivola, C. Y. 2011. Axe the tax : Taxes are disliked more than equivalent cos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SPL) : S91–S101.
- Thaler, R. 1999. Mental accounting matte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2(3) : 183–206.
- Torgler, B. 2016. Tax compliance and data : What is available and what is needed. *Australian Economic Review* 49(3) : 352–364.
- Wahl, I., Kastlunger, B., and Kirchler, E. 2010. Trust in authorities and power to enforce tax compliance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Law & Policy* 32(4) : 383–406.
- Wenzel, M. 2003. Tax compliance and the psychology of justice : Mapping the field. In V. Braithwaite (Ed.), *Taxing Democracy. Understanding Tax Avoidance and Evasion* (pp. 41–70). Aldershot : Ashgate Publishing Limited.
- _____, M. 2004.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2) : 213–228.

The Impact of Perceived Power of Authority, Trust in Authority and Attitudes Towards Taxpaying on Tax Compliance Intention - Tax Knowledge and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

Minjo Kang*

—〈Abstract〉—

The Slipper Slope Framework (SSF) posits that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determine taxpayer compliance can be reduced into two dimensions : perceived power of authority (Power) and perceived trust in authority (Trust). According to the framework, Power, Trust and their interaction are key factors to understand taxpayer behavior and to devise tax enforcement policies. Hence,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lausibility of SSF in the context of Korean tax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n tax authority. Notably, the study not only examines empirical validity of SSF but also seeks to find a better way to adopt the tax compliance framework in association with the importance of tax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with regard to fiscal policy. The experiment conducted via online survey with 107 college students shows that tax educ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s regarding Power and Trust. Moreover, the interaction of Power and Trust, attitudes toward taxpaying, and risk preference have been found to affect tax compliance intention in a hypothetical income tax evasion scenario. The result implies that SSF can come into play in establishing and administering tax enforcement strategies that foster taxpayer compliance. In particular, tax education and information campaign should be redesigned to shape appropriate tax knowledge in regard to perceived power of authority and trust in authority.

〈Key words〉 tax compliance, power of authority, trust in authority, Slippery slope framework, tax knowledge

* Ph.D candidate,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minjokang@yonsei.ac.kr, First Author

부록 : 설문도구 예시(강한 힘/높은 신뢰)

「세무신고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세무신고의사결정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실험은 가상적 상황 하에서의 세무 신고에 대한 귀하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실험은 납세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므로 귀하가 소득세 신고납세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의 납세자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에는 어떠한 정답도 없습니다. 설문은 9점 척도로 측정되며, 제시된 진술에 강하게 동의 할수록 큰 점수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 다음 내용은 언론기사, 정책보고서, 공식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납세환경의 현 주소를 서술한 것입니다. 지문을 자세히 읽은 후 이어지는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조사기법 개발, 탈세 패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탈루수준을 정교하게 분석함으로써 조사행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고의적 지능적 탈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세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탈세제보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탈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에 대하여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을 살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96%는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 사이의 세 부담이 공평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명 중 6명이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을 보통 이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전국 일선 세무서엔 민원봉사실이 구축되어 있고,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업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60%는 소득세신고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낮거나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의 납세환경이 높게 평가된 덕분에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하였다.

2. 귀하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임을 상상하고 다음 각각의 진술을 평가해 주세요.

← 강한 부정 ... 중립 ... 강한 동의 →

나는 가산세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나는 세무당국에 의해서 적발될 위험 때문에 세금을 낸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피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은 어리석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나는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낸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세금이란 싫지만 억지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을 잠재적 탈세범으로 간주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성공한 탈세는 경영자의 능력을 대변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나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세금을 낸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나의 성실납세가 궁극적으로 모두를 이롭게 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나는 이타심(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세금을 낸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성실납세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납세는 사회로부터 내가 받은 혜택을 되갚는 일이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3. 귀하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임을 상상하고 다음 각각의 진술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1 : 반드시 누락할 것이다, 2 : 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 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4 : 아마도 누락할 것이다. 5 : 중립, 6 : 아마도 포함할 것이다, 7 : 포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8 :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귀하는 정규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아 세무당국에게 보고되지 않은 현금매출소득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중요하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수입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겠습니까?

← 반드시 누락할 것이다 중립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 →

1	2	3	4	5	6	7	8	9
---	---	---	---	---	---	---	---	---

4. 귀하가 조세관련과목의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 “예”를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관련 과목의 예로는 세법개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세무회계 등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5. 귀하가 10,000원을 내고 게임에서 이기면 2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모두 잃습니다. 이 경우 이길 확률이 최소한 몇 %가 되어야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6.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7.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래 항목에 답한 후 설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한 부정 ... 중립 ... 강한 동의 →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탈세를 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우리나라 세무당국은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